

코로나19 지방이 더 위험해졌다…대전·광주 다음은 어디?

서울 벗어난 코로나…‘충청·호남권 유행’ 수도권 안심 못해

거리두기 2단계 지자체 증가세…광주는 3단계 격상 만지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수도권 벽을 넘어 서자 지방자치단체들이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달 중순까지만 해도 수도권 지역을 벗어나지 않았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제 충청권과 호남권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다. 수도권은 다소 유행 속도가 꺾였지만, 여전히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전·광주·전남 거리두기 2 단계…지역발생, 비수도권 3.4명→ 11.7명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현재 대전

과 광주, 전남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그중 다단계 관내업체를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감염이 터진 대전은 일찌감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하는 ‘고강도 생활 속 거리두기’를 지난달 20일부터 전개 중이다.

대전시는 지난 5일 ‘고강도 생활 속 거리두기’를 종료할 예정이 있지만, 소규모 집단감염 불씨가 남아 오는 12일까지 1주일 연장하기로 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 대책본부에 따르면 5일 0시 기준 대전 서구 소재 더조은의원 관련 확진자 수는 9명으로 집계됐다. 전일 낮 12시보다 직원 2명과 가족 1

명의 확진자가 늘어난 수치다.

이번 조치로 지난 4일 휴원이 종료될 예정이던 대전 어린이집 1203 곳은 12일까지 문을 열지 못한다. 시는 또 등구·효자동과 천동, 가오동 소재 학원·교습소·실내체육도장 109곳에 내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10일까지, 실내체육도장 16곳은 12일까지 각각 연장했다.

광복사에서 시작한 코로나19가 지역사회 곳곳에 스며든 광주광역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3단계까지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5일 오후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거리두기를 격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지역에서 3일 연속으로 두 자릿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유행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할 때는 방역대응 체계(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즉시 3단계로 격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같은 조치가 내려지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 사례가 된다. 전라남도 역시 오는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돌입한다. 이는 같은 생활권인 광주 유행 상황이 심상치 않아서다. 전남은 5일 0시 기준 누적 확진자 수가 25명으로 제주를 빼면 감염자 수가 가장 적다. 하지만 광주와 생활권이 접차는 뒷에 언제든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선제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했다. 이에 따라 전남 지역에서는 실내 50명 이상, 실외는 100명 이상 모임과 행

사를 전면 금지한다.

비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유행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는 형국이다.

지난 6월 21일부터 7월 4일까지 2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11.7명으로 직전 2주간 3.4명에 비해 3.4배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 일평균 확진자 수가 19.4명으로 직전 2주간 33.4명에 비해 14명 감소한 것과 정반대 유행 흐름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 2주 일 일평균 확진 33.4명→19.4명…조금만 방심해도 2단계

최근 유행 속도를 볼 때 수도권은 지방에 비해 비교적 한숨을 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는 수치로도 확인되고 있다.

지난 6월 21일부터 7월 4일까지

수도권의 2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19.4명으로 직전 2주간 33.4명에 비해 14명 줄었다.

지난달 이태원 클럽과 부천 쿠팡센터 등에서 집단감염이 연이어 발생한 것에 비춰보면 유행 속도가 꺾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국내 전체 인구 절반이 2500만명이 몰려사는 수도권 특성상 언제든 집단감염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는 어디로 훨지 모르는 력비공 같은 감염경로를 보이고 있다.

확진자 1명이 언제든 집단감염을 일으키고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면 수도권은 다른 지역보다 격상 조건이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정 기자



초등학교 방역 소독 6일 광주 북구 용봉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용봉동행정복지센터 직원들과 동생 활동·역단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긴급 방역 소독을 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북구 관내 초등학생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대해 임시 휴교령을 내렸다.(광주북구 제공)

검찰, SNS서 10대 알몸사진 받은 40대 징역 7년 구형

선고공판일 오는 23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사회관계망)에서 10대 청소년의 알몸사진을 제공받고 선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검찰이 징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5)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2월 중순쯤 오픈채팅방에서 선물 등을 미끼로 수차례에 걸쳐 10대 여학생에게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보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측은 “상대방이 10대인지 몰랐고 선물은 피해자가 요구해서 3만 원 상당의 초콜릿을 보냈다”며 선물을 보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어른으로서 피해자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이를 몰랐고 사진을 받는 과정에서 협박이나 강요, 대가도 없었다”며 “일반적인 성착취범과는 다르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사건 선고공판일은 7월 23일 오전 10시다.

“금양오피스텔 안갔다” 거짓진술 60대 확진자 고발

방문 사실 드러난 뒤 ‘산책을 갔다’ 동선 숨겨

방역당국이 동선을 숨기고 거짓을 진술한 60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를 고발했다.

광주 서구보건소는 광주 37번째 확진자 A씨(60대·여)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6월 27일 코로나19에 확진된 A씨는 동구 한 한방병원에서 34번째 확진자와 만난 사실만

을 진술하는 등 역학조사에 비협조적이었다. 추가 역학조사에서 A씨가 지난달 중순 방문판매발(發) 지역감염이 확산하던 대전에 들른 사실이 드러났다.

또 광주지역 코로나19 확산의 매개가 된 금양오피스텔에 방문한 사실도 밝히지 않았고 역학조사로 방문 사실이 드러난 뒤에도 ‘산책을 갔다’고 거짓으로 진술하기도 했다. 방역당국은 A씨의 거짓진술로 광주지역 코로나19

전파경로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A씨가 지난달 25일 43·44번 째 확진자와 만난 금양오피스텔은 종교시설, 노인시설 등으로 코로나19가 전파되는 매개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구보건소 관계자는 “A씨가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한 초기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며 “선제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확진자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확진 4·6세 남매, 음압병실 외할머니와 동반 입원



6일 오전 광주 동구청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 선별진료소에서 한 아이가 검체 채취 후 얼굴을 가리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금양오피스텔 관련 광주 110번 확진자의 외손주 2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아이들이 치료를 받는 동안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판단, 당초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 중인 외할머니와 동반 입원시켰

로나19 치료를 받고 있는 외할머니가 돌보게 된다. 외할머니는 ‘광주 110번 확진자’로 빛고을전남대 병원에서 격리치료 중으로, 두 남매의 확진 경로로 추정된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날 110번 확진자의 외손주 2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네 살 남이는 113번, 여섯 살 여아는 114번으로 분류됐다.

아이들은 외할머니·아버지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어머니는 외국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당국은 아이들이 치료를 받는 동안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판단, 당초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 중인 외할머니와 동반 입원시켰

다.

외할머니는 지난 4일 검체를 채취해 5일 양성 판정을 받고 오전에 빛고을 전남대 병원으로 이송됐다.

밀접촉자인 남매는 5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오후 확진 판정을 받아 외할머니와 함께 입원했다.

남매와 외할머니 3명이 한 병실을 이용하며 치료를 받고 있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외할머니가 70대 고령으로 음성 판정을 받은 아버지를 동반 입원시키는 것을 검토했었다”며 “그러나 평소에도 외할머니가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이슬 기자